5·31지방선거 D-48 선거문화 미숙하다

⑤ 유권자 무관심

내가 찍은 한표 '지방정치' 발전 앞당긴다

투표율 낮으면 검증되지 않은 인물 당선
언론 등 통해 젊은층 투표 참여 이끌어야

50일이 채남지 않은 5·31 지방선거가 전략공천 갈등, 특별당비 파문, 선거법 위반 등 혼탁·과열 양상이 재연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후보나 선거일도 잘 모르는 등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선관위 등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95년 1회 전국동시선거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다 '정치 환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 이번 지방선거도 그야말로 '출마자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지난달 15일 광주일보의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이 광주·전남지역민 1천2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이번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10.1%, '별로 없다' 32.3% 등 모두 42.4%가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올 지방선거부터 19세까지 선거연령이 확대되지만 19~29세 연령대는 64.7%, 학생층은 68.5%가 선거에 무관심했다.

또 지난 2월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광주시민 72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6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55.4%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장 예비후보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시의원 예비후보들에 대해서는 59.2%가, 구의원 예비후보들에 대해서는 무려 68%가 각각 모른다고 대답했다.

역대 동시지방선거 참여도를 보더라도 광주의 경우 지난 95년(1회) 64.8%, 98년(2회) 45.1%, 2002년(3회) 42.4%, 전남의 경우도 지난 95년 76.1%, 98년 68.2%, 2002년 65.6%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투표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맡은 일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중하다"며 "유권자의 무관심은 온당하지 않은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지방정치의 낙후를 방관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내년 2조2천억원대의 광주시예산과 1조원대의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등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예산 증감 권한을 갖고 있다. 또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례안을 심의·확정하고 행정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면서 광역단체의 운영과 조직을 좌우한다.

때문에 선관위는 각종 매체를 통해 5·31 지방선거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의 선거참여와 관심을 홍보하기 위해 대학 앞 캠페인을 강화하고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e-메일을 발송하고 후원기업을 선정해 각종 이벤트를 겸한 문자메시지 발송도 강구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소속 연대' 실현될까

당 공천탈락 후보들 가능성 시사
고건 전 총리와 연계땐 변수될 듯

광주·전남에서 당 공천에 탈락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무소속 후보들간 연대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인 고건 전 국무총리가 이번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정가에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점도 무소속 연대와 관련해 관심거리다.

▲무소속 연대 가능한가=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이 서구청장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반발,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부패한 가치관을 정화하기 위해 양심적이고 중도개혁적인 모든 세력과 연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무소속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북구청장 전략공천에 반발하고 있는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 의장은 이날 "중앙당 재심 논의를 지켜본 뒤 전략공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병태 광산구청장도 지난 3일 열린우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소속 후보들과 연대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의 시민배심원제에서 탈락한 후보들도 선거법상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소속 연대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파괴력은=무소속 연대의 가능성은 높지만 그 파괴력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강운태(광주 남구), 이정일(해남·진도), 박주선(보성·화순) 무소속 후보가 '느슨한' 연대로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잡음 등으로 기존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후보들이 인물 대결을 펼치게 될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 전 총리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무소속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고건' 변수가 선거의 이슈로 떠오른다면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총선 보다 낮은데다, 현재까지 마땅한 무소속 광역단체장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보다 보편적이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 지역에 밀착한 활동을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괴력이 갑자기 높아지기 어렵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해 봅시다"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참석자들이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좌측부터 천영세 민노당 의원단대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매니페스토 운동' 대신 '참공약 선택하기' 사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우리말 이름을 '참공약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매니페스토 운동 우리말 찾기 공모에 나서 1천270명이 제출한 3천301편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 없이 선관위가 자체 작명한 '참공약선택하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수작에는 '바른공약 실천운동'과 '참공약 실천운동'이 선정됐고, '선거공약 따져보기', '참공약 바로보기', '선거공약 실천지킴이운동' 등 10편은 장려상을 받았다.

선관위는 앞으로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활동에서 매니페스토운동 대신 '참공약선택하기'란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김수용후보, 경선탈락 사촌형 위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조카로 5·31 지방선거 신안군수 후보에 나란히 출마했던 열린우리당 김수용 후보가 12일 성명서를 통해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한 사촌형인 김관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을 위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이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조카들의 대결 가능성 보도에 난감해하신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사촌간의 집안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번민의 나날을 보내며 고민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신안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고서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도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은 후보에는 축하를, 탈락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與 예비후보, 주민소환 입법 촉구

○…열린우리당 김재균 광주시장 예비후보, 이형석 북구청장 후보, 김선옥 서구청장 예비후보, 이혜명 남구청장 예비후보, 박영수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 후보자 45명은 12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18일 주민소환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후보는 "광주 광역시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소환제가 있었다면 여기자를 성희롱한 한나라당 출신의 최연희 의원이 지금처럼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택예비후보 상가 등 민생투어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하남공단 내 (주)한국닉스, (유)대동 등 중소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상가·교육현장 등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민생투어에 나섰다. 조 후보는 또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림빌딩 2층(351-8300)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오는 14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갖는다.

"1억 헌금 선거법 위반 공식입장 아니다"

○…교회 '1억원 헌금'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 본보 12일자 3면〉와 관련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부인의 교회 1억원 헌금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은 한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였을 뿐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12일 밝혔다.

장흥군 선관위는 "'1억원 헌금'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현재 경찰이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법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